

지역에너지계획과 시민참여

_현황 그리고 질문들

한재각(운영부소장)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지역에너지계획 그리고 시민참여 현황

‘지역에너지’_공식적 의제화 시작

- 대규모 중앙집중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문제점과 소규모 지역분산적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 요구
 - 위험한 핵기술의 이용,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의 대량 배출, 지역공동체에 대한 피해와 억압, 비민주적 의사결정 등
 - 2000년대 중반부터 소규모 지역분산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상상하면서 ‘지역에너지’에 관한 논의와 실천들이 꾸준히 진행
- 2011년의 후쿠시마 핵사고와 “밀양 할매”들의 초고압 송전탑 반대 운동
 - ‘지역에너지’에 관한 관심은 사회운동 차원을 넘어서 지자체의 공식적인 의제화
 - ‘탈핵에너지전환 도시선언’(2012년)과 서울-경기-충남-제주의 ‘지역에너지전환 공동선언’(2015년) 발표,
 - 몇몇 광역지자체들의 혁신적인 에너지정책(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사업) 추진
 - 최근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 결성

지역에너지에 관한 상이한 시각

- 시민사회/지자체의 시각
 - 지역에너지(Local Energy)를 “지역에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전제로 에너지 정책을 만들고 에너지를 생산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유진, 2010: 37)
 - 2030/205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장기적인 에너지자립/전환 계획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증가
- 중앙정부의 시각
 - <에너지법>, 5년 단위로 광역지자체의 5년 기간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의무화
 - 중앙집권적으로 수립·추진되며 핵·화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공급중심적인 국가에너지계획을 보조하는 역할.

지자체 지역에너지정책의 도전과 중앙정부의 반응

- 몇몇 광역지자체의 혁신적이고 독자적인 지역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
 - 법적 의무가 없는 기초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움직임
 - 국가에너지계획과의 불일치, 지자체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행보들은 중앙정부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에너지 권한을 잠재적으로 위협으로 간주
- 산업자원부의 ‘지역에너지계획’ 지침(2017)
 -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지역에너지계획’을 규율하기 위해서 새롭게 지침을 제시(이정필, 2017).

에너지 시민참여

왜 시민(주민) 참여가 중요한가?

1.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추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저항과 갈등

- 삼척과 영덕의 핵발전 유치 찬반 투표
- 밀양과 청도 등의 초고압 송전탑 갈등
- 부산 등의 노후 핵발전소 폐쇄 주민 운동 등



2. 핵위험과 기후변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에너지전환의 현장과 주체는 지역과 시민

- 대규모 중앙집중적 에너지 시스템을 지역분산적 소규모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
- 공급이 아니라 소비 관리를 중심으로 정책의 변화,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하고 줄이는데 시민 참여가 핵심



한국 에너지시민의 등장

어느 차원/수준에서의 참여?



어떤 시민참여?



- 전화 여론조사?
- 공청회?
- 길거리 스티커 붙이기?



숙의적 시민참여!

선호취합적 참여제도	숙의적 참여제도
•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선호 취합	• 의견이나 선호의 변화가능성 전제
• 추가적인 정보제공이나 토론을 고려하지 않음	• 추가적인 정보제공이나 사람들간의 상호작용 고려
• 최종정책 결정단계에서 주로 활용	• 정책결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주로 활용
• 단기간	• 중·장기간(일정기간의 숙의 과정 설정)
• 의견조사, 공청회, 자문위원회, 국민투표 등	• 합의회의, 시민배심원, 시나리오 워크숍, 포커스 그룹, 공론조사 등
* 출처: 김명진(2005)	

기후변화나 에너지와 같이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여러 전문적 정보와 지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는 숙의적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

어느 정도나 참여?



한국에서의 에너지 시민(주민)참여 현황

국제적 수준

- 유엔 기후변화 협상 세계 시민회의(2015년)



-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등이 주관, 전세계 77개국 참여, 한국 가톨릭대 연구팀 진행.
- 일반시민 100명이 참여, 6-8명의 소그룹 토론하고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질문에 대한 투표를 진행

국가적 수준

- 전력정책 미래 시민합의회의(2004년)
- 시민참여형 대안에너지 시나리오 개발(2015년)



- 시기: 2015년 5~11월(7개월)
- 주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시민패널(성, 나이, 직업, 15명)

지역적 수준

- 대구지역에너지계획(2015년)
- 전주지역에너지계획(2015년)



우리의 손으로 만드는
'전주 2025 에너지 안전도시 시나리오(지역에너지계획)' 참가자 모집 안내

"2025년 전주 지역에너지계획"
전주의 미래를 설계할 분을 찾습니다.



(기초)지역에너지계획과 주민참여 현황

지역		제목	시기	주민참여 방식
서울	노원	탈핵에너지전환 종합대책	2012년	-
서울	성북	성북구 온실가스감축 행동계획	2013년 1월	-
서울	강동	지속가능한 기후환경도시 2030 실행계획	2016년 12월	-
경기	안산	안산시 지역에너지 조성계획	2015년 12월	지역에너지포럼/명칭 공모
경기	광명	광명시 에너지자립 및 주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2017년 3월	에너지시민회의(시민기획단 49명)
경기	시흥	시흥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2017년 3월	-
경기	군포	군포시 지속·자립 가능한 지역에너지 실행계획	2017년 4월	-
경기	김포	김포시 에너지 자립도시 실행계획	2017년 5월	-
경기	구리	구리시 에너지 자립도시 실행계획	2017년 6월	-
경기	안성	안성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연구용역	2017년 7월	정보제공
경기	여주	여주시 지역에너지 조성계획	2017년 8월	정보제공
경기	양평	양평군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2017년 9월	정보제공
경기	수원	수원시 에너지종합대책/지역에너지계획	2012년/2013년	-
경기	부평	부평구 주민참여형 기후변화 대응 세부시행계획	2015년 10월	정보제공/인식조사/시민단체 협의
경기	과천	지역에너지계획	2010년	-
강원	인제	인제군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2015년 12월	-
전북	완주	완주군 지역에너지전환 기초계획	2013년	-
전북	전주	전주시 에너지안전(자립)도시 지역에너지계획	2016년 3월	시나리오워크숍(시민패널 50명)
전남	순천	순천시 지역에너지계획	2015년 3월	-

자료: 한재각(2017)

기초지자체의 독자적인 지역에너지계획

_제도적 기반: 에너지조례

- 과천시, 수원시, 안산시 그리고 광명시는 에너지조례에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규정
- 과천시 <에너지기본조례> 제6조에서 명시
- 광명시 조례 제4조의 시장의 책무에서 명시_“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 정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
- 안성시는 계획 수립 근거 조항은 있으나 의무 사항은 아니며, 여주시는 계획 수립의 근거 조항이 없다.

기초지자체의 독자적인 지역에너지계획 _시민참여의 다양한 수준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계획 수립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알리고(안성, 여주, 양평)
-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거나(부평),
- 전문성에 기초하여 선택된 사람들로 구성된 포럼/간담회를 운영하기도 했다(안산, 인제).
-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패널을 구성하여 숙의적 방식의 시민참여 과정을 조직하기도 했다(전주, 광명).

검토할 사례들

광역지자체

대구시의 사례	오용석(대구지속협 사무처장)
서울시의 사례	이유진(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
경기도의 사례	안명균(경기도 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실행위원장)
충청남도의 사례	여형범(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기초지자체

전주시의 사례	이정필(예정연 상임연구원)
안산시의 사례	류홍번(안산 YMCA 사무총장)
서울시 강북구의 사례	신근정(녹색연합 에너지팀장)

**지역에너지계획과 시민참여
_방법론 등에 관한 질문**

세미나 질문들

1.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집행에서 ‘시민/주민 참여’는 왜 중요하며, 무엇을 의미하는가?
2.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집행에서 시민참여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무엇인가?
3.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집행에서 시민참여의 구체적인 양태와 성공/실패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4.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은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가?
5.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집행시의 시민참여의 환경/조건들은 차이가 나는가?

시민참여 방법론의 질문(1)

1. 시민참여, 누가 참여하는 것인가?

- 민간 참여와 시민참여는 어떻게 다른가?_특별한 시민(전문가)의 참여? 기업 등의 이해관계자의 참여? 시민단체 대표의 참여? ‘일반 시민’의 참여?
- 지역(기초지자체) 혹은 지역주민의 참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

2. 시민참여의 수준과 범위는?

- 시민참여를 통해서 수렴하려는 의견은 무엇이고, 시민들이 결정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단순 의견 제시/의사결정의 참여/집행과 모니터링/평가)
- ‘일반시민’은 누구이며 몇 명이나 참여해야 하는가? (숙의성과 대표성의 트레이드 오프, 전문성과 시민성, 비용과 시간의 문제 등)

시민참여 방법론의 질문(2)

3. 시민패널들이 전문적 질문을 다룰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 시민패널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그리고 다양한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 시나리오 기법의 활용?

4. 시민참여의 동기를 고취하고 지속/확장하는 방법은?

-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성공은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지속 여부에 좌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도적 기반과 효과에 대한 질문

1.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누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책임을 지는가? 시민참여 방법론의 채용에 대해 누가 승인하는가? 그 결과를 누가 확정하는가?
 - (지자체 발주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

2. 시민참여형 계획 수립은 집행에서도 효과를 발휘하는가?
 - ‘참여 효과의 가설’_계획 수립에 참여하면 집행에도 참여하여 계획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